

광주시, 추경 심의 전 사업자 선정 '논란'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사업 3억 심의위 안거쳐

민간공모 사업 불구 편성 법령·절차 무시

광주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령 및 절차 등을 무시한데다 일부 사업은 예산안 심의 전에 이미 사업자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의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일부 사업 예산을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민간이전 공모사업임에 따라 사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경 예산안 심의 전에 이미 사업자 선정을 마쳤으며, 선정된 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뒤늦게 예산안을 제출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따라 긴급재해대책비용을 제외하고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 공모에 1개 업체만이 참여하자 재공모를 했고, 또 다시 1개 업체만이 응모하자 3차례 공모를 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일에 맞추기 위해 계약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예산편성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사업을 예산 심의에서 통과시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인 이은방 의원은 "문화전당 개관은 지난해 이미 올해 9월 개관하기로 예정됐던 만큼 이 사업

에 대한 관련 예산은 본예산이나 늦어도 1회 추경에서 편성, 추진해야 마땅했다"면서 "윤장현 광주시장의 긴급한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기간 중 시민들의 도심공원 열기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의견을 반영해 지난 4일 개관일에 대비해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라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했다"면서 "예비비 3억원 사용 문제는 시의회에 보고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지역실정 맞는 남북교류사업 추진

젓소·수소 정자 기증

통일 동화책 지원도

광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0년 5·24 조치로 단절됐던 남북 교류가 최근 8·24 공동합의로 인해 새로운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7일 시 남북교류협의회 임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는 교류분야를 크게 인도적 지원사업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적 사업으로는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규모 목장 조성사업인 '세포동판' 목장 완공에 맞춰 축산분야 협력사업을 펼 계획이다. 북측과 협의해 낙농사업 위주의 젓소 기증과 수소 정자도 기증할 예정이다.

또 종자배급과 배양기술, 유가공 기술을 전수하고 남북축산업 사업과 연계해 중장기적인 경영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우수생산을 통해 북측

어린이 영양개선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 동화책 지원사업은 민족 동질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 동화작가들이 모여 창작·구연 동화를 함께 작업하는 것이다. 평양에서 그림을 그리면 남한에서 글을 쓰는 형식으로 교류하게 된다. 대중적 접근이 쉽고 통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북 에너지협력사업과 사회문화교류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대 조성, 태풍 '고니'로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지원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2005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를 창립해, 북한 수해지역 주택 복구 지원·평양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 지원 등 다양한 남북 지원활동을 벌여왔으나 5·24 조치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은 40억5000만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집행액은 1억 2800만원에 불과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의회 행자위, 광주정보문화진흥원 방문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남) 위원들이 7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 직원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듣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서부소방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직접 찾아가 업무현황을 듣고 시설을 확인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일제 강점기 광주 역사기록물 유스퀘어서 전시

시, 8일~11일까지

광주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7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쫄면 삶'이란 주제의 일제 강점기 광주 역사기록물 전시를 8일부터 11일까지 유스퀘어(광천터미널) 내 영풍문고 앞 U-스토리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순회 전시는 많은 시민들이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적 역사를 교훈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난달 시청 전시 이후 쏟아진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되는 어린 소년·소녀들의 강제 동원 모습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시 사진은 강제 동원된 산중인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라며 "지난달 시청 전시를 관람하지 못했거나 관람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번 전시회를 꼭 관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일제강점기 일상생활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모습 등 총 4개 분야 사진 83점을 전시했으며, 강제동원 생존자와 유가족, 어르신, 학생, 시청 공무원, 가계단위 관람객까지 이어지면서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마주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부대수영장·광주여대 체육관 '시립' 명기 추진

시민공모 결정 10개월만에

시의회, 대학과 상의 없어 논란

광주시의회가 시민공모로 결정한 일부 체육시설의 이름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변경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부대수영장과 광주여대 체육관 등의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2015 하계 U대회경기장' 시

설명청에 시가 건립했다는 표시를 넣어 '남부대국제수영장'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으로,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으로 각각 개정기로 했다.

행자위는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체육시설이 대학의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불식하고 대학교의 자의적인 사용과 방치를 막음으로써 시민들이 부담없이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체육시설은 지난해 11월 시민공모를 통해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10개월여만에, 그것

도 시의회가 시민공모를 무시한 채 시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변경을 추진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시립'과 '국제'가 병기돼 부조화한 데다, 부지를 제공한 해당 대학들과도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아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이같은 시립 명칭 넣기가 장기적으로 퇴직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남부대 한 관계자는 "총 662억원이 들어간 수영장에 300억원대의 땅을 우리대

학이 제공했다"면서 "조례의 논리대로라면 시비가 들어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도 시립을 넣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주경남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시설에 시립을 넣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앞으로 다른 시설에도 세금이 들어간 경우 시립 병기를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칭은 시민공모를 통해 결정을 했지만, 현행 대로라면 학교 시설로 인지되면서 시민들에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립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속에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9일부터 DJ센터서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제7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9일부터 3일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포스코건설, 기아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광주지방기상청 등 공공기관 등 143곳이 381개 부스를 마련하는 등 대규모로 열린다.

특히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맞춤형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업체와 관련 분야 공무원이 상담하는

공공구매상담회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 산업전은 기후와 환경산업분야의 전문화된 전시운영과 서비스로 국제수준의 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전시협회(UFI)로부터 UFI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2년 연속 국제전시인증 획득하는 등 환경산업 신기술의 국제적인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KOTRA를 通하면 세계로 향하는 수출길이 열립니다
KOTRA가 글로벌비즈니스 플랫폼이 되어 더 큰 시장,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정상외교 경제활용 설명회 및 해외시장 수출전략 상담회 개최안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상외교 지방순회 설명회(경제행사 활용방법, 경제사절단 참여 성공사례 안내) 및 해외시장 수출전략 상담회를 개최 하오니 기업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최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 1홀
- 개최일시 2015. 9. 15(화), 14:00 ~ 19:30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경제외교성과확산협의회
- 프로그램
 - 정상외교 경제활용 지방순회 설명회
 - 일대일 진출전략 컨설팅 서비스
 - 국내 고객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지원)
- 신청기간 9. 12(토) 까지
- 문의처 이라영 사원 062-369-9053

산업통상자원부 MOTIE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